

디지털 대한민국 정책 시리즈 제9호

# 안심하고 준비하는 디지털 경제 안전망 구축

안춘모

본 보고서는 ETRI 기술정책연구본부 주요사업인  
“국가 지능화 기술정책 및 표준화 연구”를 통해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 ◆ 요약 ◆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지금 이 시점에도 많은 분야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탈바꿈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희망하는 디지털 탈바꿈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예컨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동화된 무인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지, 맞춤형 추천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확증편향을 심화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개인, 사회, 산업, 공공분야의 문제를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디지털 탈바꿈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탈바꿈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 해결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우리나라 디지털의 선호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탈바꿈은 자유로운 혁신이 이루어지고, 차별없이 공정한 기회가 창출되며,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자를 포함한 연구진들은 개인, 사회, 산업, 공공의 4개 분야에 12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산업분야의 세 번째 과제인 “안심하고 대비하는 디지털 경제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한다.

## 📖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로 이행 중

-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위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에 의한 플랫폼 경제와 더불어 COVID-19 확산에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2가지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

디지털 혁신이 수반하는 여러 이슈를 고민

-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은 경제·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기존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이슈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
- 본 고에서는 디지털 경제 성장과 디지털 혁신 확산과 함께 수반되는 경제·산업 부문의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이 끼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함

## 📖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비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이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운용

- 국내에서는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운용 중
  - 사회안전망은 광의로는 사회보장과 같은 의미이며, 협의로는 자신의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장치를 의미
  - 국내 공적안전망은 3층 구조로 구성
    - ※ 1차 안전망은 사회보험으로 5대 보험제도(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가 시행되고 있으며, 2차 안전망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3차 안전망은 긴급지원제도로써 금전 또는 현물의 직접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등 [2]

※ 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 실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현재 기존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이 공존

- 혁신적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디지털 경제의 진전은 경제·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기존 사회안전망의 운용에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기존 안전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들이 출현
  - (기존의 지속적인 이슈) PC와 인터넷을 통해 경제·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 따라서,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해 등 부정적 현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중대처법」 등과 같이 제도적인 관점에서 해결책 모색 중
  - (디지털 전환 이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혹은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해 디지털전환이 진행되며 직업군이 재편되고 있으며,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며 기존 산업 판도를 뒤 흔듬. 그럼에도, 현재의 근로소득자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에 얽매어 생활 중
  - (감염병 출현 동반 이슈) COVID-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서비스 대중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대한 사회적 니즈 증대로 인해, 노동 시장 변화,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O2O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됨. 특히, 배달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산이 주목할만하며, 이에 따라 소위 플랫폼 노동자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이슈화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회적 변화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혁신을 요구

- COVID-19의 확산과 장기화, 온라인 상거래로의 변화, 비대면·무인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안전망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
  - 외환위기 이후 국내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간 나뉠대로 균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 [1]
  - 평생직장 의식 약화, 공유경제, 무인경제, 플랫폼 노동자 확산, 고용관계의 변화 등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 ※ 경제구조 재편에 따라 사회적 불확실성, 실업 불안,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준비가 되지 않은 계층은 더욱 더 삶이 힘들어질 가능성 존재
  -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기 전에 구축되었다는 한계를 가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완이 필요

미래형 사회안전망인 디지털 경제 안전망 구축이 시급

- 경제·산업을 구성하는 영역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사회안전망과 같은 역할을 갖는 소위 「디지털 경제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시점
  - 기존 사회안전망이 주로 국민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관점이 강하였다면, 「디지털 경제 안전망」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전반의 핵심 이슈에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우리나라는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은 완료된 수준이나 재해 방지를 위한 활용에는 아직도 미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

디지털 경제 확산은 전통적인 직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직종의 역할 강화나 혹은 새로운 유망 직종을 출현 시키고 있는 중

(기존의 지속적인 이슈) 디지털 기술로 산업재해 예방 및 위험요인 제거

-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PC, 인터넷, 심지어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판단됨
- 국내에서는 정보화 추진시 정보통신 기술 활용을 통해 산업 재해 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부에서는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등 정보통신 활용을 통한 산업재해 대응 정책 추진 [3]
    - ※ 연도별 약 1000명의 산재 사망이 발생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상위권 점유. 건설업, 제조업 부문에서 재해율이 높으며, 배달노동자 재해도 증가 중 [4]
- 현재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통해 제도적인 관점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진행 중
  - ※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책임을 부과 [5]
- 디지털 기술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업무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 위기상황 감지 등의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대비가 가능하여, 산업재해 예방이나 위험요인 제거에 효과적인 측면을 가짐
  - 현재 국내기업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한 산업안전 솔루션이 확대 중에 있으며, 복지 서비스에도 활용
    - ※ 디지털, ICT의 산업안전보건 적용 사례로서는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화학물질 모니터링”, “화학공정 가상물리시스템”, “건설현장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철강산업 스마트 CCTV” 등이 있음 [6]
    - ※ 한전과 SK텔레콤이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가정내 전력 사용 패턴을 시 기반 솔루션으로 분석후 이상 예측시 지자체 복지담당자에게 알람으로 제공 [7]
  -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필요
    - ※ 근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취약한 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관리, 산소결핍 및 질식 재해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산업보건 사항에 대하여 현장 특성을 고려한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 직업병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데이터 이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예방 코호트 구축 등의 사례 존재 [6]

(디지털전환 관련 이슈) 디지털기술 확산으로 변화되는 일자리 변화에 적응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전통적인 직종을 소멸시키고 있는 상황
  -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사무직, 판매직, 기계조작 종사자 등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의 일자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판단되고 있음 [8]

- ※ 우리나라 노동시장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분리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3대 산업이 고위험 일자리 63% 차지 [8]
-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소멸될 경우, 발생하는 유희인력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디지털 역량 확충 교육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 전환으로 기존 직업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망 직종이 출현하는 중

- 기존 직업의 역할 가운데 디지털 전환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강화되는 직업이 존재 [9]
  - ※ IT보안 전문가, SW 개발자, 로봇개발자, 생명공학자, 3D모델러 등
-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의 활용성 증가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전망이며, 직무는 더욱 전문화/세분화될 전망 [9]
  - ※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가상현실/증강현실 전문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자, 드론 조종사관제사 등의 새로운 직업 등장
  - ※ 데이터분석가는 데이터엔지니어,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등 직무가 더욱 전문화/세분화됨

디지털 전환으로 플랫폼  
유관 기술과 직종의  
비중이 성장하는 중

● 디지털 전환 기술은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 추세로서 해당 분야 고용도 확대될 전망

-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 서비스인 배달 플랫폼 등은 묶음 배달 최적화, 배달 시간 최소화 등 라이더 최적 배차를 위해 AI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추세 [10]
  - ※ 유통, 물류 벤처기업 메쉬코리아가 운영 중인 배달 대행 서비스 '부릉'은 배송 과정에서 쌓인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배송·배차 솔루션을 운용 중이며, 배달 거점지로서 부릉스테이션 운영 등 배달 기사에 대한 편의도 제공. 메쉬코리아는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위해 다양한 노력도 진행
- 이외에 식재료 등에 대한 재고 관리 최적화 등도 연구 중

● 근로자에게는 디지털 전환이 발생시키는 직업의 소멸과 생성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교육, 재취업 등의 활동 지원이 필요

(감염병 출현 동반 이슈) 급속히 확산 중인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한 방안 추진

● COVID-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e-커머스, O2O 서비스를 플랫폼 노동자 이슈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확산은 특히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서 기존 산업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던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를 빠르게 양산
  - ※ 플랫폼 노동은 총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 [11]. 특히, (조건 3)과 (조건 4) 기준을 적용하여 “협회의 플랫폼 종사자” 식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매우  
필요한 시점

- (조건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 생산 노동
- (조건2)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short jobs, projects, tasks)을 구할 것
- (조건3)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payment)를 중개할 것
- (조건4)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있을 것

※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 [광익의 플랫폼 종사자] [11]

※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 (예시: 배달대행업의 배달기사, 가사청소업의 가사도우미, 애완견돌봄업의 펫트레이너 등)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 [11]

-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상에서 배송·운송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유연화 등의 노동 유연성 확보, 본업 이외에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점 보유

- 기업 입장에서도 현재의 플랫폼 사업자는 임금근로자를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기업을 운영함에 따라서 인력 운용 관점에서 매우 자유로운 위치에 있음

※ 쿠팡은 직고용한 쿠팡친구(쿠팡맨) 이외에 독립 배송 파트너(쿠팡플렉스, 쿠팡이츠 배달원)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활용 중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경영효율화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끌어들이지는 않는 상황

-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영역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책임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근로자 대우가 없다는 관점으로,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형태이기 때문

※ 플랫폼 노동자는 e-커머스 사업자, O2O 플랫폼 사업자·공급자와 고용관계는 없지만, 근무시 배달료 산정기준, 고용 보험 등에서 사실상 종속 관계에 있을 수 있음에도 근로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관점에서 근무시간 유연화,  
투잡, 기업관점에서는  
유연한 인력 운용  
관점에서 성장 출발

그럼에도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아직  
모호한 상태

### ▶ 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 계약서 점검 및 자유실정 추진 현황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0.5.24.)

※ 실제로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가입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사례는 빈번히 출현. 특히,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분리형 배달업을 운영하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체가 내세운 계약 조항 중 경업 금지·과도한 위약금 등 불이익한 계약 해지 조건을

정부에서는 제도에  
기반하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부과하는 조항, 배달 기사가 다중 플랫폼 이용(이하멀티호밍)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 등 지역배달대행사의 거래 플랫폼 제한과 배달기사에게 불이익 전가 조항에 넣음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 요청 [12]

-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소위 노동자,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계류 중
  - ※ O2O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있는 상황이지만, 그 내용은 노동법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라는 지적이 있음 [13]
  - ※ 그럼에도,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킥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14].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됨.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미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
  - ※ 또한, 특고(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골프장 캐디 등 15개 분야)·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배달원은 올해 기준으로 한 사업장에서 월 115만 원 이상을 받거나 월 93시간 이상 일하면 전속성이 인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됨 [15]. 특고 노동자 중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 40만명으로 추산
  - ※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현실화를 위해 파트타임 라이더(배달원)의 시간제보험 가입 활성화와 배달 플랫폼 보험료 단체할인 등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험 종합대책을 발표 [16]
- 지역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는 지역 커뮤니티 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가 기대되며,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내 공급자, 노동자를 연계할 경우 차별화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가능
  - ※ O2O서비스의 음식배달, 부동산중개, 홈클리닝, 헤어샷 등은 대부분 지역의 플랫폼 공급자와 소비자를 플랫폼 사업자가 연계하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 서비스 성격을 많이 가짐
  - ※ 현재 가장 성공적인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인 「당근마켓」은 서비스 처음부터 중고물품 거래에 거리를 제한함으로써 우리동네라는 인식을 주며 성공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이외에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된 넥스트도어로서 지역기반 SNS서비스 플랫폼으로 COVID-19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둠
  - ※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배달 수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여 서비스 제공 중. 최초의 공공배달앱인 전북 군산시 '배달의 명수', 서울시 '핑동', 경기도 '배달특급' 등 20여개 이상이 있음.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는 결국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
  - ※ 농업 솔루션 회사인 만나 CEA는 스마트팜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인 진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업. 자체 간편식 샐러드 브랜드 샐러딩을 온라인 판매 중. 진천군과 농촌 재생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공조 확대 중 [17]

지역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상생전략의  
가능성 연구 필요성이  
높음



## ④ 디지털 경제를 대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 산업현장의 예측·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운용

- (이슈·요구) 제도 중심의 사후 처리를 벗어나 기술 활용 측면의 사전 안전망 구축
  - 건설업, 제조업 부문에서 재해율이 높으며, 배달노동자 재해도 증가
  - 현재 ICT를 활용한 산업안전 보건 사례 구현이 확산 중이나, 디지털 기술의 적극 활용이 시급한 시점
- (정책) 산업현장의 예측·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운용
  - AI, 빅데이터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위험작업들은 로봇을 통해 대체하고 자동화하거나, 웨어러블 장치로 노동자 보호
  - 데이터 분석 기반 노동자 질병 예방 및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 ※ 주요질병 발생 경향 검토 및 업종별 코호트 구축·분석, 노동시간 단축 연구 등

디지털 기술로 산업재해 예방

### 원활한 일자리 변화 적응을 위해 일자리 매칭, 직무 맞춤형 교육 추진

- (이슈·요구)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변화되는 일자리 형태에 대응 필요
  - 디지털 전환으로 직업이 변화되고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함
  - (사라지는일자리) 물리적 자동화와 SW기반 자동화로 단순 직무가 축소되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 증가
  - (새로운 일자리)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플랫폼 노동자 등 증가
- (정책) 신규 직무 적응 및 재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직무 맞춤형 교육 강화
  - (재취업-일자리 매칭) 사라지는 산업군의 노동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디지털 교육 추진과 함께 일자리 매칭 지원
  - (디지털 전환 직무 교육) 기업이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직무별 디지털 전환 맞춤형 교육 지원

디지털 기술을 직무 적응과 일자리 매칭 등 고용 업무에 활용

###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한 방안 추진

- (이슈·요구) 지역기반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현 및 상생 전략 요망
  - 플랫폼 제공자나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 전개에 따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기술적 지원,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구축 필요
  - (지역 상생) 지역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런칭한 기업들의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내 플랫폼 노동자의 연계 전략
- (정책) 디지털 전환에 의한 노동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적 보완·전통기업과 노동자간 상생 협력 방안 구현



디지털 전환 이슈의  
지속적인 관리 진행

- (혜택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전환 혜택을 개인·소상공인에  
게도 공유하며, 소위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개선 진행
- (지역 보호) 지역내 창업 디지털 기반 기업과 지역 기반형 노동자의 협력을 기  
반 마련하는 디지털 기반 지역 보호 전략 추진
  - ※ 예를 들어, 농촌 커뮤니티 생산품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추진 등의 추진이 가능
  - ※ 이때 지역내 플랫폼 노동자는 물류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으며, 지역기반 플랫폼사  
업의 성장 가능성을 통해 지역 발전 기여 전망

## 참고문헌

- [1] 서상목 (2020.6.1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복지타임즈
- [2] 보험연구원 (2013.3),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정책/경영보고서
- [3] 고용노동부 (2015.11),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요약)
- [4] 연합뉴스 (2022.3.15.),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078400530>
-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6] 성윤화·정기호 (2019.12),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CT기술의 산업안전보건 적용 사례 분석, J. Korea Saf. Manag. Sci. Vol. 21 No. 4
- [7] T-World Biz 홈페이지, <http://b2b.tworld.co.kr/bizts/solution/solutionTemplate.bs?solutionId=0087>
- [8] 김건우 (2018.5.15.),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LG경제연구원
- [9] 한국고용정보원 (2019.3), 4차 산업혁명 시대 내직업찾기
- [10] 모비인사이드, <https://www.mobiinside.co.kr/2022/03/11/delivery-order-ai/>
- [11] 한국고용정보원 (2021.11.18.), 고용동향브리프 2021년 9호 -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 [12] 공정거래위원회 (2021.5.24.), 보도자료 -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 플랫폼-지역 업체 간 계약 자율 시정
- [13] 한겨레 (2021.3.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87437.html>
- [14] 고용노동부 (2021.12.29.), 보도자료 -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15]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24/113579088/1>
- [16] 조선비즈 (2022.4.28.), 인수위 “배달 라이더 ‘시간제보험’ 활성화...보험료 절반으로 ‘뚝’”
- [17] 연합뉴스 (2019.11.4.),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4131200064>

## 디지털 대한민국 정책 시리즈

- [1] 이성준,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스마트 돌봄/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 [2] 안춘모, 모든 국민의 성장 기회로서 디지털 역량 강화
- [3] 정지형,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소개와 주요국의 동향
- [4] 연승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디지털 소통의 도전과 대응
- [5] 송근혜, 신뢰사회를 저해하는 허위기만정보 대응방안
- [6] 연승준, 디지털 안전 사회
- [7] 김성민, 디지털로 다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성장
- [8] 김태한,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 [9] 안춘모, 안심하고 대비하는 디지털 경제 안전망 구축
- [10] 송근혜, 디지털 플랫폼 정부
- [11] 김태완, 글로벌 패권 경쟁 대응
- [12] 최새술, 탄소중립 시대의 디지털전환

---

## 저자소개

**안춘모**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기술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  
e-mail: cmahn@etri.re.kr Tel. 042-860-5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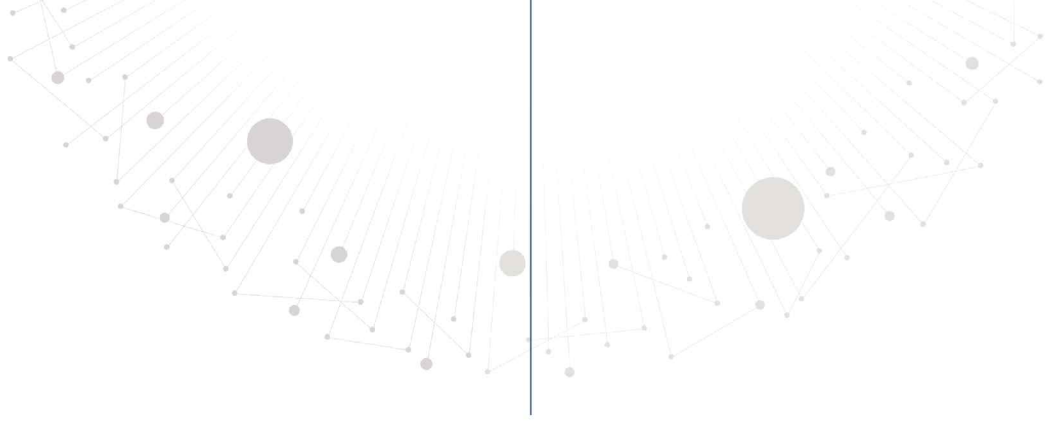
---

## 기술정책연구본부 기술정책 브리프

**발행인** 이 지 형  
**발행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 기술정책연구본부  
**발행일** 2022년 07월 31일

---





[www.etri.re.kr](http://www.etri.re.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TEL.(042) 860-6114 FAX.(042) 860-6504

